

박지원 “MBC 기자 슬리퍼? 좁쌀 대응…국민, 통큰 대통령 원해”

“1호 국민인 기자들과 소통하시라” 조연 “박근혜 길 가선 안돼…이상민 감옥 보내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앞둔 박지원 전 국정 원장이 20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부대변인의 응대는 ‘좁쌀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갈등을 풀어가는데 통큰 대통령을 원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며 국가 원수다. 기자는 1호 국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계선 동맹을 이간질 하는 MBC 기자의 탐승을 거부한 것은 헌법수호라 하신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있

지만 비판적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계선 자유, 공정, 상식을 강조 하신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삭제되었고 전용기 탑승 80여 기자 중 2명만 1시간 동안 만난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 갈등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 국민은 불안하다”며 “국민은 갈등을 풀어가는데 통 큰 대통령을 원한다. 특히 1호 국민인 기자들과 소통하시라”고 조언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9일에도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발언을 쏟아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이란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G20 정상외교가 “큰 틀에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음에도 언론을 폄박하는 민주주의 파괴로 빛이 바랬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자는 국민 1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당탄압, 언론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서는 “윤 대통령은 실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로 가선 안 된다”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옥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



연합을 탈당했다. 이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에 합류했으며, 전남 목포에서 공천을 받아 20대 총선에서 당선됐

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김원이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으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尹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납득할 수 없어”

“취약계층 주거안정 보장 대책 필요” 민생 강조 “정부·여당 반대 예상되나 할 수 있는 일 다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내년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면서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용산공영 조성 사업 303억원 전액 삭감,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예산 7조7989억원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김재환기자

민주, 興에 이태원참사 국조수용 촉구

“진실 밝히고 책임 물으란 국민명령 기억하길”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한인 21일 정오까지 국정조사 특위위원 추천 및 조사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용산경찰서의 민생치안 업무 공백이 참사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상민 장관의 경찰국 신실이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 두렵나.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은 참사의 진실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탄로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 정오까지 국정조사 특위위원 추천 등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은 더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말라. 국민의힘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명령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